

〈추진부서〉 경기도 김포시 기업지원과(031-980-2894)

## 465명 생명을 구한 규제 강화 적극행정 〈공장유도화지역내 골재공장 불승인〉

### • 추진배경

- 공장유도화지역에 골재공장 승인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난개발 확산을 방지하고 주거환경과 생명 안전에 위협을 받는 주민 보호 필요
  - 공장유도화지역\* 내 부지면적 13,170㎡, 파쇄·분쇄기 400마력 5대, 덤프25톤 600회 운행분량의 골재 분쇄·파쇄공장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농작물 오염, 마을길 포화, 농업(생업), 어린이집 및 사찰 등 생존권 위협한다며 주민 465명 집단 민원 제기
    - \* 공장유도화지역이란?
      - 공장 등 건축물의 분산입지를 지양하고 집단화를 유도해 난개발을 방지 목적으로 조례(김포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유도지역임
      - 해당기준(용도지역, 건축용도, 거리, 규모)에 적합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

### ▶ 골재공장 불승인 처분 및 법령 및 자치법규 개선 추진

### • 개선내용

| 개 선 전   | 개 선 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물 유도화 지역 허용</li> <li>- 계획관리지역 내 환경피해 유발업종(골재공장) 허용</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유도화 지역 폐지</li> <li>- 계획관리지역내 환경피해 유발업종에 골재공장을 제한업종으로 추가</li> <li>※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li> </ul> |

- 골재공장 불승인 처분 항소로 3년에 걸친 행정소송 최종 승소('20.3)
- 김포시→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대기오염배출시설 설치신고 제외조항(습식은 제외한다) 삭제 개정 건의('20.1)

### • 개선효과

- 정온시설(종교시설, 어린이집, 농가주택 등)의 생명·안전 보호와 관련법 및 제도 개선으로 시민 환경피해 근원적 차단 기반 마련



## 규제 완화에 앞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자



김포시 기업지원과  
**정 진 호**  
(031-980-2894)

이번 규제합리화경진대회는 기존의 규제완화, 규제개혁과 다른 점이 있다. 기존에는 규제를 완화하고 풀어주는 것에 중점을 둔 대회였다면, 올해는 꼭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미를 두어 규제합리화로 명칭이 바뀌었다.

1996년부터 시작되어 오랜 기간 동안의 규제완화의 부작용으로 많은 수도권의 시민들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김포시는 무분별한 공장의 난립으로 난개발지수 1위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난개발이 심한 일부 지역주민의 질병발생률이 높게 조사되기도 하였다.

법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생활하면서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마련한 기준이다. 사람을 위해 필요한 법이 오히려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은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

공무원은 법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집행자이다. 법령을 집행할 때 기계적인 적용보다 지역주민의 안전과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당연한 마음가짐이라 생각한다.

이번 사례는 규제완화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공공의 이익과 안녕을 위해 묵묵히 꼭 필요한 규제를 강화해왔던 업무가 발탁된 사례이다. 이번 사례가 많은 공직자들에게 귀감이 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꼭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는데 노력하는 공직문화가 확대되기를 바란다.